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

靑 "연 15조 시장 국내기업 참여 기반 마련 나토와 견고한 방산 공급망 구축 발판 확보"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간 면담을 계기로 양측이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오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 관련 브리핑을 갖고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거둔 주요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과 나토와의 견고한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발판을 확보했다"며 "우선 나토 사무총장 면담 계기에 양측은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고 했다.

그는 "이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의 군수 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며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협정 체결 시점과 관련해서는 특정 시한을 두지 않고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토 방산 협력이 조달 협정에 그치지 않고 다국적 협력 사업으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확인됐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 물자,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 사업 중 기존의 옵저버(참관국)로 참여해 온 한·나토 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 옵저버로 새로 참여하게 됐다"며 "작년에 헤이그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작된 다국적 협력 사업 참여가 1년 만에 확대된 것으로 나토 방산 협력이 일회성 교류가 아니라 해를 거듭하며 뿌리를 넓혀가는 협력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한국 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는 "탄약과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는 나토 간 무기 체계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한편,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우주 관련 사업 참여는 나토 동맹국이 보유한 우주 인프라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할 때 적시에 우주 발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래전 대비 차원의 혁신 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위 실장은 "나토 혁신 생태계 참여를 통해 미래전 대응 역량 강화의 기반을 구축했다"며 "전장에서 활용될 민간 혁신기술을 평가·검증하는 '나토 혁신 훈련장'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첨단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을 얻게 되고, 혁신훈련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로 나토의 조달·공동개발 사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아울러 "나토 동맹국 우주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인 '스페이스넷'에 우리 우주 기업들이 참여해, 정보 공유와 기술협력은 물론이고 나토 주관 우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8일 자신의 지역구인 진안군에서 전춘성 진안군수, 김명갑 진안군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진안군 주요 현안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양수발전소 유치·교통망 확충'

민주 안호영 의원, 진안군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8일 자신의 지역구인 진안군에서 전춘성 진안군수, 김명갑 진안군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진안군 주요 현안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를 비롯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앞둔 교통망 확충, 국가호수공원 조성,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안 의원은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역 현안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양수발전소 유치와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진안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양수발전소 유치, 진안 교통망 개선, 용담호 규제 완화와 지역 성장 전략 등이 논의됐다.

안 의원은 "양수발전소 선정과 소태정 고개 등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편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진안=우태만기자

민선9기 시정 추진 동력 강화… 전주시, 국장급 간부 공무원 인사 단행

승진 5명 · 전보 3명 구청장 전출 등 총 14명

전주시가 조직의 안정과 변화,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장급 간부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전주시는 9일자로 지방서기관 승진 5명, 국장급 전보 3명, 구청장 전출 및 파견, 퇴직 준비 교육 등 모두 14명의 국장급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조지훈 시장의 시정 운영 방향에 맞춰 업무 추진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주요 보직에 배치해 조직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과장급 간부들의 대거 승진이다.

이영숙 인구청년정책국 청년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해 인구청년정책국장에 임명됐다. 이 국장은 청년정책과 인구감소 대응 등 미래 전주시의 핵심 과제를 담당하며 축적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정책 전반을 이끌게 됐다.

이성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도서관정책과장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해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 전주시의 문화도시 정책 추진을 맡게 된다.

새만금 내 '육양국' 건립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국제 해저광케이블과 국내 통신망을 연결하는 '육양국' 건립을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드림라인이 8일 새만금청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장재영 동물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하면서 건설안전국장으로 발령됐다. 현장 중심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기반시설 관리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업무를 총괄한다.

조문성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해 상하수도본부장에 임명됐다. 농업 분야에서 쌓은 전문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행정을 책임지게 됐다.

박은주 지방사회복지사무관은 직위승진을 통해 복지환경국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복지 분야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시민 복지서비스 강화와 환경 관련 현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장급 전보 인사도 단행됐다. 김은주 인구청년국장은 경제산업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경제와 산업업무 를 총괄하게 됐으며,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발령돼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농업 발전 업무를 맡는다.

김인택 상하수도본부장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으로 이동해 시민 평생학습 기반 확대와 도서관 정책 추진을 이끌게 됐다.

구청장 인사도 함께 이뤄졌다. 임숙희 경제산업국장은 완산구청장으로 전출됐으며, 강세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덕진구청장으로 발령받아 현장 행정과 주민 소통을 책임진다.

김현옥 복지환경국장은 전주시정연구원으로 파견돼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미래 전략 수립에 참여하게 됐다.

이와 함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간부 공무원에 대한 퇴직 준비 교육 인사도 포함됐다. 이기섭 덕진구청장, 이영섭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성수 건설안전국장 등은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간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전력 이어 통신까지 확보"

민주 김의겸 의원 "피지컬AI 유치 핵심 여건 마련"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와 대규모 산업용지에 이어 국제 통신망까지 확보하면서 '피지컬 AI 산업 전략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8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국제 해저광케이블 육양국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 체결과 관련해 "새만금이 AI 데이터센터 유치의 핵심 조건인 전력·부지·통신 인프라를 모두 갖추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어촌공사, 드림라인㈜ 등이 참여해 싱가포르와 한국,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 해저 통신망의 국내 랜딩 포인트를 새만금에 구축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육양국은 해외 데이터가 국내로 들어오는 '데이터 국제공항'과 같은 시설"이라며 "AI 데이터센터는 단순히 전력만 확보한다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통신망이 필수적인 통신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해저광케이블 연결로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과 넓은 부지에 더해 글로벌 데이터 연결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핵심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국내 국제 해저케이블이 부산·경남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새만금 육양국 구축은 통신망 분산과 국가적 회복력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자연재해나 안보위협 발생 시 국제 통신망의 우회 경로를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새만금을 국제 통신망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글로벌 클라우드·AI 기업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해저케이블과 육양국을 추가로 유치해 새만금을 로봇·AI·수소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피지컬 AI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핵심 통신 인프라인 만큼 육양국의 보안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도 중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사항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의장단 소통 행보

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장과 소태수 부의장은 지난 7일부터, 남원 동부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관내 22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를 방문하는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제10대 의회의 의정 방향을 공유하고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의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복지·문화 단체들을 두루 아우르며 소통의 폭을 넓혔다.

한명숙 의장은 "제10대 남원시의회의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시민과의 소통이라며,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원구성 완료

의장 이복형 · 부의장 정상섭

이복형 의장

정상섭 부의장

박일 운영위원장

이남희 행정위원장

서향경 경산위원장

정읍시의회(의장 이복형)는 7일부터 8일까지 제314회 임시회를 열어 제10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7일 제1차 본회의 의장단 선거에서는 이복형(무소속·4선) 의원이 제10대 전반기 의장으로, 정상섭(더불어민주당·2선) 의원이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이어 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에 박일(더불어민주당·6선)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 이남희(더불어민주당·2선) 의원, 경제산업위원장에 서향경(더불어민주당·2선) 의원을 각각 선출하며 전반기 원구성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복형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민생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는 정읍시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위, 민원 사각지대·부정수급 잡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 사각지대 해소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행정 데이터의 활용을 정책 설계부터 정책효과 분석까지 전 단계에 걸쳐 확대한다.

권익위는 수요자 중심형 정책 지원을 위해 △민원 사각지대 해소 △공공재정 부정수급 대응 △국민체감 정책 개선 등 3대 분야에 대한 데이터 시범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우선 디지털 민원 창구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국민신문고 비(非)전자 민원 비율 등을 분석해 현장 소통이 필요한 곳을 선정, 맞춤형 지원한다.

또 과거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등 처분 이행 점검 데이터를 바탕으로 취약 분야를 진단하고, 위험군을 분류해 선제적인 부패 예방에 나선다.

/뉴시스

산후조리원 폐업 피해 막고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민주 윤준병 의원, '산후돌봄체계 강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산후돌봄체계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의 폐업·휴업 신고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에 대한 사전 안내, 이용료 환불 등 보호 장치가 부족했다. 이에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이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미이용 요금을 반환하며, 이용 중인 산모와 영유아의 안전한 퇴원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 간 산후돌봄 격차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추진한다.

윤 의원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책임지는 산후조리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가 지역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